상반기 '노쇼 사기' 광주 129건 20억 피해…수사는 미진

2월 4건·3월 2건·4월 54건·5월 59건·6월 46건 갈수록 기승
전담팀 꾸린 경찰 명의 대여자 등 13명 검거…관리책 5명 추적
점조직 형태 수사 어려움…민사소송 외 피해액 되찾을 길 없어

올해만 광주에서 이른바 '노쇼 사기'로 120여명 넘는 자영업자들이 20억여원 손해를 봤지만, 상당수 범인은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상반기 중 잡은 범인은 13명이 전부였다.

더구나 현행법상 범인을 붙잡아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더라도 곧장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돌아올 수 없어 피해 자영업자들은 민사 소송을 걸고 법정 싸움까지 해야 할 판이다.

광주경찰청은 19일 기준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노쇼 사기는 정치인, 공무원 등을 사칭해 구매 계약을 맺은 뒤,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고 돌연 연락을 끊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을 가리킨다.

이 중 3명은 해외 피싱 조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국내 전화로 둔갑시켜 피해자 휴대전화에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해 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0명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조직 관리책을 맡은 5명을 특정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 체포영장을 발부해 추적 중이다.

노쇼 사기 피해는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총 129건 접수됐다. 1월 1건, 2월 4건, 3월 2건, 4월 54건, 5월 59건, 6월 19일까지 46건 등이다. 피해액은 2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25일 노쇼 사기 주의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지난달 22일 형사기동대원 41명을 모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노쇼 사기범들은 전국 각지에서 노쇼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비대면 중고물품 판매사기 등을 병행해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 한 명의 사기범이 적게는 15건에서 많게는 90여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해외에 기반을 두고 해외전화를 중계하는 조직 관리책, 대포폰·통장 공급책, 자금세탁 조직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검거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노쇼 사기는 식당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업체로 범행 대상을 넓히고 있었다.

최근 광주시 북구의 한 이불 가게에는 "군부대에서 쓸 장병들 훈련 나갈 때 쓸 이불을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피싱 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병사들에게 줄 전투식량을 대신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며, 전투식량 대리 결제가 이뤄지자 피싱 조직은 잠적했다.

광주시의 한 악기상은 교도소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 조직으로부터 "재소자 교육용 통기타를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밖에도 소방관, 정당인, 금호타이어 직원, 조선대 축제 초대가수 기획사 등을 사칭하는 등 피싱 조직의 '범행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도 노쇼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할 처지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따라 피해 금액을 몰수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노쇼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로 구분된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범죄 조직과 재화·용역을 대가로 거래 관계를 맺은 뒤 일방 파기당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노쇼 사기범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범행 의지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범죄 피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들이 기소 후 형사재판까지 마무리되고 민사 소송을 걸어야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받고 통신조회 등을 거쳐 특정을 하는 데 피의자 한 명당 한달 반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범죄 조직이 해외에 있어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력을 끌어모아 최선을 다해 추적 및 검거를 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북구청 청년간부회의 헌혈증서 130매 기증 19일 광주시 북구 헌혈의 집에서 북구청 청년간부회의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민주주의, 생명으로 잇다'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헌혈과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벌여 총 130매의 헌혈증서를 모아 헌혈의 집에 전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총학, 혁신파크 부지 이전 서명 운동

"5·18 공간 보조운동장 훼손 안돼"

전남대 운동장에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는 것을 두고 총학생회가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나섰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18일부터 '캠퍼스 혁신파크 원안 추진 반대 전남대 재학생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보조운동장(대운동장과 용지 사이 흙 운동장)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캠퍼스 혁신파크'를 설치하라는 게 학생회 요구사항이다.

국토교통부, LH·북구청, 전남대는 전남대 보조운동장 일대에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4월 국토부·교육부·중기부의 '2021년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총 사업비 594억원(국비 191억원, 시비 80억원, 구비 5억원, 민자 318억원)을 들여 학교 부지(3만 5136㎡)에 산·학·연 협업 및 기업입주 공간, 주거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세우게 된다.

총학생회는 학교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서명운동 홈페이지에 "보조운동장은 5·18 당시 3공수여단의 주둔지로 쓰이는 등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상징 공간으로 산업시설을 조성하면 그 가치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남대 자체가 5·18 역사와 깊게 관여돼 있는 만큼, 총학생회 측의 논리대로면 전남대에 신규 시설을 유치·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학생회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 학교측과 대화 후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라임 김봉현 술접대 무죄'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김 전 회장·변호사도 유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작년 10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나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 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에 합류했고, 나씨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참석자별 수수액을 얼마로 산정할지가 관건이었다.

검찰은 초기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고, 추가 접객원과 밴드로 인한 비용 55만원은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어서 기소를 피했다.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고인 3명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원수에 1명씩을 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피고인 3명의 1인당 수수액은 93만 9000원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술값 등 481만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240만원을 '기본 술값 등'으로 따로 분류한 뒤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5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비용은 김 전 행정관을 분모로 포함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씨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약 102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씨는 징계받은 이후 사직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 IGAA 보험GA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